



Print ISSN: 2093-9582

Online ISSN 2508-4593

<http://dx.doi.org/10.21871/KJFM.2022.12.13.4.1>

Topic Modeling of News Article Related to Franchise Regulation Using LDA*

LDA 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규제’ 관련 뉴스기사 토픽모델링

Woo-Ryeong YANG 양우령¹, Hoe Chang YANG 양희창²

Received: October 05, 2022 Revised: December 09, 2022 Accepted: December 23, 2022.

Abstract

Purpose: In 2020, the franchise industry accomplished a significant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s the number of franchise companies increased by 9.0% while the number of franchise brands increased by 12.5%. Despite growth in size,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underwent many negative incidents, such as franchise ownership sales to private equity funds, that led to deterioration of busines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make various proposals to help policy makers develop franchise industry policies by analyzing trends of the current and previo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franchise policies and regulations using newspaper articl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total of 7,439 articles registered in Naver API from February 25, 2013 to November 29, 2021 were extracted. Among them, 34 unrelated video articles were deleted, and a total of 7,405 articles from both administration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 package was used for word frequency analysis, word clouding, word correlation analysis, and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Results:**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clude 'no-brand', 'major company', 'bill', 'business field', and 'SMEs', and those mention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clude 'industry' and 'policy'. As a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9 topics such as 'global startups' and 'job creation'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10 topics such as 'franchise business' and 'distribution industry'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on were derived. The results of LDAvis showed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perated a policy based on mutual growth of large and small businesses rather than hostile regulations in the franchise business, where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tended the regulation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to the employment sector. **Conclusions:** The analysis of past two administrations' franchise policy, it can be suggested that franchisors and franchisees may complement each other in developing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chieving balanced growth. Moreover, political support is needed for sound development of franchisor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study.

Keywords: Franchise, Franchise Regulation, News Article, LDA, Topic Modeling

JEL Classification Code : C80, L20, L80, M10, M12, M30.

1. 서론

영세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시장의 동향이 대기업 편중과 브랜드 편중 현상으로 변화된 것에 힘입어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내 기간산업으로 성장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2021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프랜차이즈 기업 수는 전년에 비해 9.0% 증가한 5,403 개이며,

* This study was presented at the KJFM 2021 Fall Conference and was reviewed by two anonymous reviewers.

¹ 1st Author: Ph.D.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Integrated Course of Master & Doctoral, Dept. of Business Informatics, Hanyang University, Korea, wooryeong325@naver.com

²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Jangan University, Hwaseong, Korea, Email: pricezzang@jangan.ac.kr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전년 대비 12.5% 증가한 6,847 개로 발표되었다 (FFA, 2021).

그러나 성장 상황을 반영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정적인 상황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 년 모건스탠리의 (주)놀부의 인수를 시작으로 10 년간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예를 들 수 있다. KFC, 커피빈, 아웃백스테이크 등은 글로벌 브랜드의 독점 운영권을 매각하였고, 창고43, 카페베네, 메드포칼릭, BHC, 맘스터치 등 토종 브랜드 또한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다 (Seoul Economy Daily, 202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매각 현상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소비자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혁신 부재와, 배달시장 팽창에 따른 비용 증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규제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부 위정자들이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사업자는 을”이라는 프레임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프랜차이즈사업 (또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가맹본부 (Franchisor)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사용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전국단위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을 통해 재고비용, 점포운영비, 인건비와 같은 유통망 유지·관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eng & Jhung, 2017). 한편, 가맹점사업자 (Franchisee)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노하우, 기술력, 브랜드 명성, 경영지원 및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사업 경험을 보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홍보,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Maeng & Jhung, 2017). 이렇듯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다수의 협력업체와 소비자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로 복잡하게 얽힌 산업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창업창직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평균 이상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 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근거하여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02 년 5 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Choi et al., 2005).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제정은

소비자와 가맹점사업자 관점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었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가맹사업 관련 법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Seoul Economy Daily,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기구의 시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내 기간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최근 상황에 대해 뉴스 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2 월 25 일부터 2021 년 11 월 29 일까지 네이버 API 에 등록된 총 7,405 개의 기사를 R 패키지를 활용하여 단어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단어 상관분석 및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정책 기초의 확인과 함께 뉴스에서 다루어진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뉴스의 확인·비교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균형되고 공정한 시각을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고찰

2.1. 프랜차이즈 규제

우리나라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을 들 수 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LC, 2021). 이에 따라 가맹사업진흥법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제 4 조)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제 9 조), 전문성 제고 (제 10 조), 기술개발사업 등 (제 11 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2 조), 창업 지원 (제 13 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 14 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제 15 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 16 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 16조의2) 및 자금지원 (제 17 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산업의 양적 팽창과 대기업의 진입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가맹본부와 판매량에 대한 밀어내기 할당, 일방적인 상권 분할 등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2 년 11 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NLIC, 2021). 이 법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같은 기본원칙 (제 2 장)과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계약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 3 장)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분쟁 조정 (제 4 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 5 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에 따라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정책은 상당히 변화된 것이 사실이며, 가맹사업법의 개정 방향 또한 가맹사업법의 본래 목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방향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의제 (Agenda)의 영향으로 2012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모범거래 기준'에 적용된 가맹점 사이의 출점 거리 제한은 2014 년 5 월 기업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출점 기준을 없애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율 협의에 맡기게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2018 년 다시 편의점의 출점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정권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정자들의 시각이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인 '을'이며 가맹본부는 착취를 일삼는 '갑'이라는 프레임에 고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펼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모토로 한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명박 정부는 2010 년 12 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거리 제한, 대형마트의 월 휴무 의무화 같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가맹점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동반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출점 경쟁이 가속화되어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한편 고착화된 시각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연구원 (KERI)의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미국에 비해 두배 많은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거나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orea Franchise Industry Newspaper, 2019).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 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23 개로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 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을'로 표현된 가맹점주 단체가 신고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이 명시되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Seoul Economy Daily, 2021). 이런 결과들은 정부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라는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의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의제의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맹사업법 개정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과제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마련,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관리금 제도 보장,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창조경제의 창업 촉진, 내수수출 균형경제 과제의 투자여건 확충 과제의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자동효력 상실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경우 국정운영 5 개년 계획과 함께 제시한 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4대 복합혁신과제 중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와 함께 100 대 국정과제 중 Table 1 에 제시한 과제들이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때와 달리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Market Economy News, 2020). 예를 들어, 폐점 이후, 배송 금지로 인해 이커머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출점 제한 연장, 지역상권과의 상생 의무 강제 등을 발의하였으며,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여당의 공약은 결국 규제의 부메랑효과로 인해 공멸하게 될 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뉴스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법령이나 공약보다는 언론의 보도에 의해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로

시대를 구분하고 이 기간에 보도된 뉴스기사 중에서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기사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차기 정권에 프랜차이즈산업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단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economic policies of each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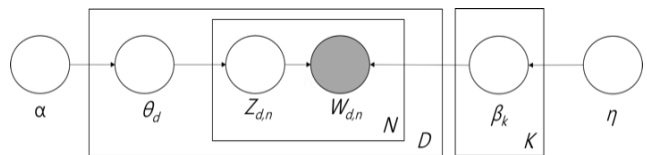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민주화 - 하도급법, - 정년 60세 연장법 - 불공정거래 금지법 -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 역동적인 혁신 경제: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 - 내수·수출 균형경제: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2.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은 비구조화된 텍스트 자료들의 집합에서 의미 있는 주제 (토픽)를 추출해주는 확률적 모델 알고리즘 (Blei, Ng, & Jordan, 2003; Park & Oh, 2017)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토픽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기법이다 (Song, 2017).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문서집합에서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에 대응되는 문서를 식별하여 제공하며,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토픽으로만 할당되는 일반적인 군집화 (clustering) 기법과는 다르게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동시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모델링에 보다 적합한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Kim et al, 2017; Park & Oh, 2017). 또 다른 토픽모델링의 강점은 문서가 다양한 단어들의 결합체로서 키워드들 간의 특정 관계에 따라 군집화 되어 유형화할 수 있고, 키워드들이 모여 생성된 토픽들을 조합하면 또 한개의 문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Kim & Baek, 2016).

토픽모델링의 초기에는 확률적 잠재의미분석 (pLSA;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기법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채택한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은 잠재의미분석의 확률분포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토픽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Blei et al, 2003). LDA 는 추출된 토픽의 단어 비중과 문서의 토픽 비중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결합확률분포에 따라 문서의 토픽을 찾는 과정으로 두 변수 모두 양의 실수를 요소로 가지며, 모든 요소를 더한 값이 1 이 되는 Dirichlet 분포를 따르는 분석 방법이다 (Blei et al, 2003; Moon et al, 2019; Yoon & Kim, 2020). LDA 는 문서, 단어 등 관찰된 변수를 통해 문맥이나 문서의 구조 등 보이지 않는 변수를 추론하는 방법 (Park & Oh, 2017)으로 토픽에 따라 문서 집합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이미지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Blei, 2012), 인터넷 리뷰, 신문기사, 논문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잠재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Jo et al., 2019).



Source: Blei (2012).

Figure 1: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LDA

Figure 1 은 Blei (2012)의 LDA 그래프 모델을 인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K 는 결정된 토픽의 개수를 의미하며, α 는 θ 값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η 는 β 값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Park & Oh, 2017). θ 는 문서들의 토픽 비율 (topic proportions)이며, β 는 토픽별 단어인 W 의 생성비율 (per-corpora topic distributions)이고, $Z_{d,n}$ 은 문서 d 의 n 번째 단어의 토픽을 뜻하고, $W_{d,n}$ 은 문서에서 관측되는 변수 (observed variable)로 문서 d 의 n 번째 단어를 뜻한다. 따라서 θ 는 각 문서집합에 대한 주제의 비율 값으로 Dirichlet 분포를 따르며 θ 값에 따라 문서집합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주제인 Z 가 결정되고, 문서들의 단어의 주제인

Z 와 토픽별 단어의 생성비율인 β 값에 따라 단어 W 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Park & Oh, 2017).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네이버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각 정부 기간별 뉴스를 웹 스크래핑 (web scraping)한 후 R Package 4.1.1를 이용하여 LDA 토픽모델링이 실시되었다. 데이터 시각화는 각 토픽과 토픽 내 단어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화하여 해당 문서집합에서 주요한 토픽과 단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 기반 토픽모델링 시각화 도구인 LDAvis (Sievrt & Shirley, 2014)가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는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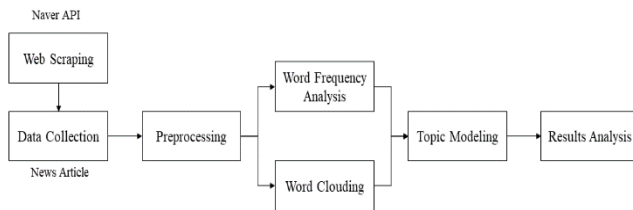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rocedures

3.1. 데이터 수집

뉴스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API 를 활용하여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와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 (2021년 11월 29일)까지의 뉴스 중 네이버 스포츠뉴스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규제'를 웹크롤링한 결과 총 7,439 개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관련 없는 동영상 기사 34 개를 삭제하고 박근혜정부 기간의 뉴스기사 3,085 개와 현 정부 기간의 뉴스기사 4,320 개가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3.2. 전처리 (preprocessing)

전처리 (preprocessing)는 데이터 분석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으로 (Kim et al., 2021), 특수기호, 숫자, 불용어 등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 '기존', '생각', '뉴스', '배포'와 같은 일반 단어들과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각 언론사 명과 '프랜차이즈'를 제거하였다. '규제'의 경우 규제와 관련된 단어와의

상관분석을 위해 유지하고자 하였다. 전처리한 결과 박근혜정부 기간의 총 문자수는 6,769,636 개에서 3,945,266 개, 총 단어수는 1,622,151 개에서 1,412,152 개로, 문재인정부 기간의 총 문자수는 10,987,067 개에서 6,280,331 개, 총 단어수는 2,636,503 개에서 2,302,470 개가 도출되었다.

4. 연구결과

4.1. 키워드 빈도분석 및 워드 클라우딩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상위 20 개 키워드 중 박근혜정부 기간에만 언급된 키워드는 '노브랜드' (3,025), '대기업' (3,991), '법안' (3,031), '업종' (3,440), '중소기업' (2,985)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기간에만 언급된 키워드는 '업계' (5,491), '정책' (4,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와 워드클라우딩 결과는 Appendix 1, 2, 3 에 제시하였다.

상위 20 개 키워드 중 두 정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키워드 빈도에 대해 점유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Appendix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를 제외하고는 '가맹', '가맹점', '규제',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개입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박근혜 정부때보다 심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findAssoc 함수를 이용하여 '규제'와 단어간 상관계수가 0.3 이상인 단어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식약처' (0.34), '규제개혁' (0.33)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대형마트' (0.48), '상품판매대금' (0.45), '온라인몰' (0.45), '이마트몰' (0.45), '지연지급' (0.45), '휴업' (0.44), '유통' (0.37), '유통산업' (0.33), '판매장려금' (0.33), '아울렛' (0.32), 및 '지원자금' (0.31) 등이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가맹사업, 특히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기간에 대한 워드클라우딩 (word clouding) 결과는 <Appendix 3>에 제시되었다.

4.2. LDA 토픽모델링

토픽 수 (k)는 연구자들이 토픽모델링을 통해 결과 도출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숫자로 결정하는 것 (Nahm, 2016)으로 특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픽 수 결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Yang, 2021). 예를 들면, 토픽 일관성 값인 응집도

(Coherence)를 최대화 하는 토픽 수가 도출되거나, 혼잡도(perplexity) 지수가 최소인 토픽 수가 결정되기도 한다 (e.g. Kim et al., 2021; Yoon & Kim, 2020). 한편, 로그우도 추정치(Log Likelihood Expectation)의 사용을 제안한 Griffiths & Steyvers (2004)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Lee & Yi, 2021). 본 연구에서는 Griffiths & Steyvers (2004), Cao et al. (2009), Arun et al. (2010), and Deveaud et al. (2014)가 제안한 방법을 R 패키지의 FindTopicsNumber 명령어를 활용하여 토픽 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Yang, 2021).

분석 결과, Arun et al. (2010)의 결과는 계속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배제하고, Griffiths and Steyvers (2004), Cao et al. (2009), and Deveaud et al. (2014)의 최대, 최소값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의 토픽 수 (k)는 9 개, 문재인 정부 기간의 토픽 수는 10 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see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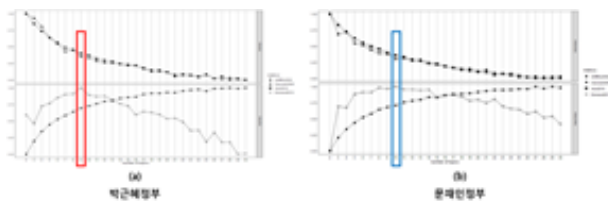


Figure 3: Analysis results to determine the number of topics

LDA 알고리즘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결과, 각 토픽의 상위 15 개 단어를 도출하고, LDAvis로 시각화한 단어들을 포함한 후, 마케팅을 전공한 교수 2 인과 함께 각 주제별 토픽 명을 결정한 결과는 Appendix 4에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의 <토픽 1>은 매장, 노브랜드, 창업, 진출, 해외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이를 프랜차이즈 기업의 '글로벌 창업'으로 명명되었다. <토픽 2>는 산업, 기업,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일자리 창출', <토픽 3>은 투자, 시장, 서비스, 금융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금융투자 서비스', 그리고 <토픽 4>는 가격, 배달, 치킨 등 배달 관련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배달'로 명명되었다. <토픽 5>는 일자리, 정규, 노동자, 최저임금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고용관련 규제', <토픽 6>은 업종, 대기업, 적합, 중소기업, 지정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동반성장', <토픽 7>은 가맹, 가맹점, 본부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가맹사업', 그리고 <토픽 8>은 경제, 법안, 국회, 민주화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이를 '법률 및 정책'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토픽 9>는 상가, 투자, 부동산, 임대료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이를 '임대차'로 명명되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기간의 <토픽 1>은 가맹, 가맹점, 공정위, 공개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가맹사업', <토픽 2>는 편의점, 노브랜드, 점포, 업종, 유통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유통업', 그리고 <토픽 3>은 기업, 산업, 지원, 창업, 혁신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혁신기업 창업지원'으로 명명되었다. <토픽 4>는 최저임금, 정책, 일자리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고용관련 규제', <토픽 5>는 정부, 국회, 정치, 정관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법률 및 정책', 그리고 <토픽 6>은 투자, 기업, 시장, 중국, 서비스, 대출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금융투자 서비스'로 명명되었다. <토픽 7>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배달', <토픽 8>은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친환경 규제', 그리고 <토픽 9>는 카페, 거리, 단계, 방역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최근 창궐한 COVID-19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 영업규제'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토픽 10>은 상가, 부동산, 투자, 분양 등의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임대차'로 명명되었다.

각 정부의 토픽모델링 결과를 IDM 비율로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토픽 1>의 '글로벌 창업'부터 <토픽 4>의 '배달'까지의 비율이 58.8%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토픽 1>의 '가맹사업'부터 <토픽 4>의 '고용관련 규제'가 57.8%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가맹사업, 유통업, 고용관련 규제가 훨씬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프랜차이즈기업들이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며 이유로 들었던 규제관련 경영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규제가 상당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탈 탄소 사회를 향한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우, <토픽 3>의 '금융투자 서비스'와 <토픽 4>의 '배달'부분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배달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유추되며, <토픽 6>의 '동반성장'과 '가맹사업'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맹사업에 있어 적대적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기조로 정책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토픽 4>의 '고용관련 규제'가 <토픽 1>의 '가맹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가맹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고용부문까지 확대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토픽 7>의 '배달'도 <토픽 2>의 '유통업'에 포함되어 있어 유통업과 관련된 배달 관련 규제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토픽모델링 결과를 LDAvis로 시각화한 결과는 Appendix 5에 제시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뉴스기사 분석을 통해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총 7,405 개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 결과, 상위 20 개 키워드 중 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언급된 키워드는 '노브랜드' (3,025), '대기업' (3,991), '법인' (3,031), '업종' (3,440), '중소기업' (2,985)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 기간에만 언급된 키워드는 '업계' (5,491), '정책' (4,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정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키워드 빈도에 대해 점유 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를 제외하고는 '가맹', '가맹점', '규제',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개입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박근혜 정부때보다 심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규제'와 단어 간 상관계수가 0.3 이상인 단어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식약처', '규제개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대형마트', '상품판매대금', '온라인몰', '이마트몰', '지연지급', '휴업', '유통', '유통산업', '판매장려금', '아울렛' 및 '지원자금' 등이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가맹사업, 특히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LDA 토픽모델링 결과,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글로벌 창업',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 서비스', '배달', 고용관련 규제, '동반성장' 등의 9 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가맹사업', '유통업', 혁신기업 창업지원' '고용관련 규제' 등의 10 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또한 각 정부의 토픽모델링 결과를 IDM 비율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토픽 1>의 '글로벌 창업'부터 <토픽 4>의 '배달'까지의 비율이 58.8%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토픽 1>의 '가맹사업'부터 <토픽 4>의 '고용관련 규제'가 57.8%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가맹사업, 유통업, 고용관련 규제가 훨씬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프랜차이즈기업들이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며 이유로 들었던 규제관련 경영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탈 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LDAvis 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맹사업에 있어 적대적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기조로 한

정책이 운영되었던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고용부문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통업과 관련된 배달 관련 규제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2 개 정권의 경제관련 정책비교와 함께 뉴스기사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책 차이를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현 정권의 정책수행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차기 정부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가맹사업관련 정책이 가맹본부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KERI)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사업의 종주국인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규제,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Korea Franchise Industry Newspaper, 2019). 또한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제 6 조의 가맹사업자 준수사항을 제외하고 다양한 규제대상이 가맹본부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시각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를 자율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전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정부의 정책기조를 확인한 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까지 사모펀드에 매각된 프랜차이즈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경영목표는 수익성 극대화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후 재매각을 통한 수익실현을 도모하는데 반해, 가맹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가맹본부의 수익성과 경영의지를 악화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은 결국 가맹점사업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가맹본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현정권이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거 노무현정부가 골목상권 관련 핵심정책으로 프랜차이즈 육성에 힘쓴 것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활기찬 골목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이런 노력의 이유는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과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건전한 프랜차이즈 육성이라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관점을 적용하면 최근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브랜드만 소유한 채 이를 이용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건전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이미 실험을 완료하고 충분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 경험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한 투명성 확보와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예비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의 규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수립 이전에 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사업당사자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위험 억제능력을 통한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맹사업의 성장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공감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맹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하우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반 명사 등 보통명칭이나 관용하는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평가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의 요건에 제외된다. 따라서 상표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표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사업은 경쟁자가 동일 상표에 다른 디자인을 포함한 의장등록을 하는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사전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 제고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같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가맹점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로 일관된 가맹사업법의 전반적인 검토를 제안한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등은 건전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간의 담합과 개별거래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붕괴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남성전용 이발업종인 B사의 경우, 빠른 기간 내에 1,000개가 넘는 전국적인 가맹점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많은 사업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일한 색상과 유사한 상표를 활용한 경쟁점포의 등장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지역별 개별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의 수익모델을 훼손하게 되어 결국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가맹계약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가맹계약서의 작성은 건전한 가맹계약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벌규정을 적용하되 전체 기업이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요인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과 정책검토를 제안하였지만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빈도분석이나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보듯이, '노브', '랜드'와 같이 동일 단어가 분리되는 문제를 나타낸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의 문제인지 네이버 API에 탑재된 뉴스 기사의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뉴스기사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한 것은 소비자들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해당 시점의 관심 끌기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픽 수 결정과 토픽 명칭부여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로그우도 추정치(Log Likelihood Expectation)를 활용한 토픽 수 결정방법을 적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응집도(Coherence)나 혼잡도(perplexity)를 함께 적용하여 토픽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토픽 명칭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크롤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키워드 총 개수가 달라지는 바이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한계로 들 수 있다.

References

- Arun, R., Suresh, V., Veni Madhavan, C. E., & Narasimha Myrthy, M. N. (2010).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s. In: Zaki M.J., Yu J.X., Ravindran B., Pudi V. (eds) *Advances i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AKDD 2010.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6118. Springer, Berlin, Heidelberg. <https://doi.org/10.1007/978-3->

- 642-13657-3_43
- Blei, D.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2009).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1775-1781.
- Choi, Y. H., Ryu, J. H., & Yoem, G. S. (2005). A study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revision direc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Fair Trade Commission Service Report*, Fair Trade Commission.
- Chuang, J., Manning, C. D., & Heer, J. (2012). Termite: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assessing textual topic models. *Advanced Visual Interfaces*, 12, 21-25.
- Chun, T. Y., Lee, D. K., & Park, N. H. (2020). The effect of marketing activities on the brand recognition, brand familiarity, and purchase intention on the SNS of franchise companies.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7(11), 955-966.
- Deveaud, R., SanJuan, E., & Bellot, P. (2014).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 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érique*, 17, 61-84.
- FFA(2021). *2021 Franchise Industry Statistics* (Report). Seoul: Foodservice & Franchise Agency(FFA).
- Griffiths, T.,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NAS*, 101(11), 5228-5235. <http://ffa.or.kr/61/?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52304&t=board>
- Jo, H. I., Kim, J. W., & Lee, B. G. (2019).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lockchain using LDA topic modeling: Focusing on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7), 1,453-1,460.
- Kim, J. E., & Baek, S. G. (2016). Analysis of issues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using text big data analytic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409-436.
- Kim, J. Y., Na, H. S., & Park, K. H. (2021). Topic modeling of profit adjustment research trend in Korean accoun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125-139.
- Kim, N. G., Lee, D. H. Choi, H. C., & Wong, W. X. S. (2017). Investigations on techniques an applications of text analytic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42(2), 471-492.
- Korea Franchise Industry Newspaper (2019). [SPECIAL REPORT] *Comparison of Korea-US Franchise Business Act Regulations* (November 5, 2019 article)
- Lee, D. Y., & Yi, H. S. (2021). Exploring method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topics in LDA: Focusing on perplexity and harmonic mean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4(1), 1-30.
- Maeng, S. S., & Jung, Y. K. (2017). Legal disputes o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efficient regulation plans. *Economic Law Studies*, 16(1), 235-256.
- Market Economy News (2020). *Shut up and regulation?... If the mart needs to live, the 'self-employed' also live* (article dated June 20, 2020).
- Moon, Y. H., & Choi, J. H. (2018). Content analysis of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23(4), 51-73.
- Nahm, C. H. (2016). An illustrative application of topic modeling method to a farmers diary. *Cross-Cultural Studies*, 22(1), 89-135.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NLIC) (2021). [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18267,20210615\)](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18267,20210615))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NLIC) (2021). [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18569,20211207\)](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18569,20211207))
- Park, J. H., & Oh, H. J. (2017). Comparison of topic modeling methods for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LDA and HD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35-258.
- Seoul Economy Daily (2021). *23 'Affiliation Act Amendment Bill' in Regulatory Strikes Shakes the Affiliate Ecosystem* (January 27, 2021 article)
- Song, M. (2017). *Text Mining*. Seoul: Book Publishig Cheonglam.
- Yoon, S. U., Kim, M. C. (2020). Topic modeling on fine dust issues using LDA Analysis.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29(2), 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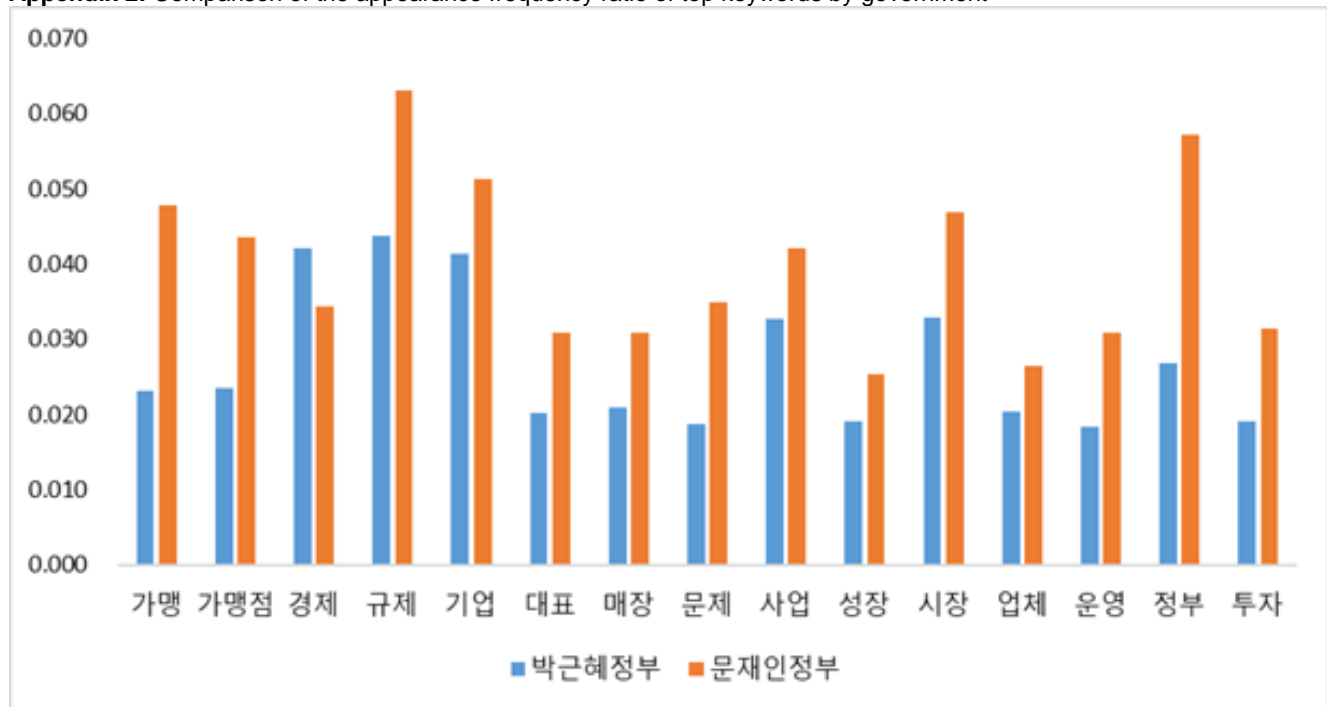
Appendixes

Appendix 1: Top 20 Keywords by government

Rank	Keyword				Rank	Keyword			
	박근혜 정부	Freq.	문재인 정부	Freq		박근혜 정부	Freq	문재인 정부	Freq
1	규제	6,881	규제	9,892	11	매장	3,297	경제	5,404
2	경제	6,612	정부	8,980	12	업체	3,188	투자	4,931
3	기업	6,488	기업	8,047	13	대표	3,180	매장	4,859
4	시장	5,176	가맹	7,493	14	법안	3,031	대표	4,859
5	사업	5,122	시장	7,349	15	노브랜드	3,025	운영	4,850
6	정보	4,202	가맹점	6,830	16	성장	3,009	관계	4,369
7	대기업	3,991	사업	6,622	17	투자	2,990	소비	4,194
8	가맹점	3,690	공인	5,637	18	중소기업	2,985	업체	4,156
9	가맹	3,618	업계	5,491	19	문제	2,936	정책	4,117
10	업종	3,440	문제	5,486	20	운영	2,866	성장	3,978

Note) '노브' and '랜드' are separated and marked as '노브랜드'

Appendix 2: Comparison of the appearance frequency ratio of top keywords by government



Appendix 3: Results of word clo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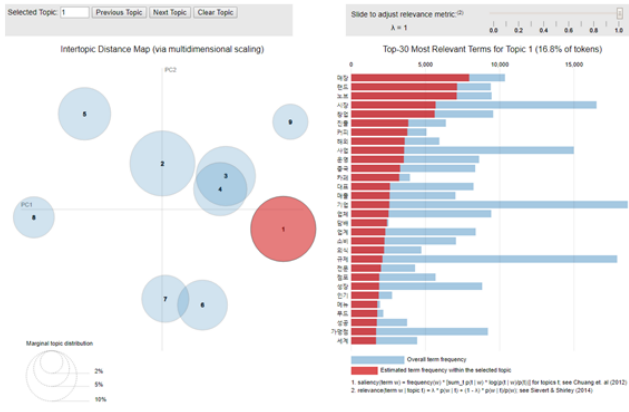


Appendix 4: Results of topic modeling and top 15 words in each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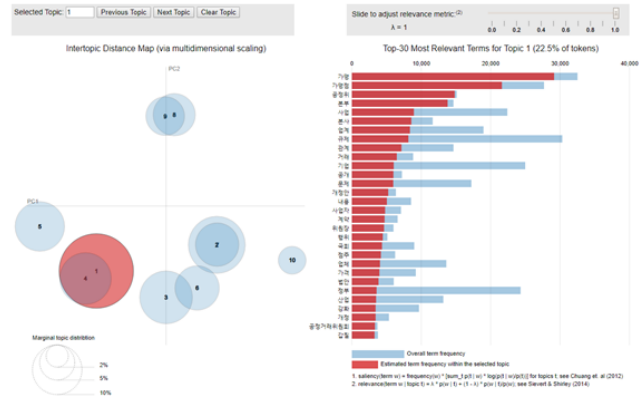
	# of IDM	Ratio	Topic name	Top 15 words in each topic
P a r k ' s	1	16.8	글로벌 창업	매장, 랜드, 노브, 시장, 창업, 진출, 커피, 해외, 사업, 운영, 중국, 카페, 대표, 매출, 기업
	2	16.8	일자리 창출	산업, 기업, 지원, 공인, 경제, 정부, 규제, 창업, 중소기업, 사업, 정책, 소상, 시장, 일자리, 추진
	3	14.0	금융투자 서비스	투자, 시장, 기업, 중국, 게임, 사업, 그룹, 서비스, 인수, 성장, 삼성, 업체, 금융, 매출, 회사
	4	11.2	배달	가격, 맥주, 정부, 중국, 판매, 소비, 병원, 규제, 제품, 업체, 시장, 식품, 배달, 업계, 치킨
	5	10.9	고용관련 규제	경제, 문제, 사회, 정부, 대통령, 사람, 후보, 일자리, 정규, 기업, 정치, 정책, 노동자, 최저임금, 정관
	6	9.9	동반성장	업종, 대기업, 규제, 적합, 중소기업, 동반, 기업, 빵집, 성장, 상권, 지정, 제한, 업체, 골목, 출점
	7	8.8	가맹사업	가맹, 가맹점, 편의점, 본부, 사업, 본사, 영업, 사업자, 계약, 점포, 점주, 업계, 규제, 매출, 거래
	8	6.7	법률 및 정책	경제, 법안, 국회, 민주화, 개정안, 처리, 규제, 통과, 대표, 민주, 거래, 기업, 내용, 대기업, 입법,
	9	4.9	임대차	상가, 투자, 상권, 부동산, 지역, 주택, 분양, 임대료, 아파트, 수익, 한옥, 건물, 오피스텔, 대출, 호텔
M o o n ' s	1	22.5	가맹사업	가맹, 가맹점, 공정위, 본부, 사업, 본사, 업계, 규제, 관계, 거래, 기업, 공개, 문제, 개정안, 내용
	2	13.2	유통업	편의점, 노브, 매장, 규제, 랜드, 점포, 시장, 운영, 매출, 업계, 가맹점, 사업, 상권, 업종
	3	11.3	혁신기업 창업지원	기업, 산업, 지원, 사업, 규제, 창업, 기술, 혁신, 개발, 분야, 장관, 확대, 추진, 관리, 경제
	4	10.8	고용관련 규제	정부, 공인, 최저임금, 경제, 정책, 인상, 일자리, 소상, 자영업자, 성장, 문제, 고용, 기업, 규제, 중소기업
	5	10.0	법률 및 정책	정부, 문제, 대표, 국민, 대통령, 국회, 사회, 사실, 정치, 사람, 경제, 정권, 여성, 논란

6	8.0	금융투자 서비스	투자, 기업, 시장, 중국, 은행, 금융, 게임, 서비스, 거래, 회사, 미국, 결제, 대출, 대표, 가격, 업체, 글로벌, 상장, 소비, 사업, 세계, 전자, 펀드, 판매, 인수, 성장, 규제, 가치, 매출, 상품
7	7.6	배달	택시, 배달, 맥주, 서비스, 플랫폼, 시장, 사업, 업계, 공유, 업체, 음식, 수제, 주방, 로봇, 운영
8	7.3	친환경 규제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매장, 소비, 규제, 커피, 제품, 카페, 일회용품, 재활용, 음료, 업체, 쓰레기
9	6.1	코로나 영업제한	카페, 거리, 단계, 매장, 방역, 시간, 영업, 운영, 서울, 손님, 음식, 조치, 식당, 사회, 금지
10	3.1	임대차	상가, 부동산, 투자, 수요, 분양, 상권, 상업시설, 지역, 아파트, 예정, 오피스텔, 주택, 규제, 수익, 시장

Appendix 5: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visualization



(a) 박근혜정부



(b) 문재인정부